

'08. 9. 10 (수)

- 제130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시정질문 -

답 변 요 지 서

기획행정국장

질문요지서 목록

의 원 명	질 문 요 약	비 고
계	3건 (서면 1건)	
<div>① 김현식 의원</div> <div>② 곽호종 의원</div>	<div> 1.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충주시의 정책결정 및 기타 목적에 부합되나? 행정낭비,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용으로 인한 감축계획, 운영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? ·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2007년 위원회의 회의개최 수, 법령·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현황은 ? </div> <div> 1. 도로명주소 사용의 장·단점은 무엇이며 필요성은 ? 2.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대책 시행은 어떤가 ? </div>	<div>기획감사과</div> <div>종합민원실</div> <div>총 무 과 (서면)</div>

답 변 요 지 서

질문의원	김 헌 식	답변공무원	기획행정국장
<p>□ 질문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충주시의 정책결정 및 기타 목적에 부합되나? 행정낭비,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용으로 인한 감축계획, 운영방법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 가 ? ○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2007년 위원회의 회의 개최 수, 법령,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현황은? <p>□ 답변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운영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07년 말 위원회 운영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개최 : 309회(71개 위원회) - 설치근거 : 법령 56개, 조례 15개 · '08년 현재 위원회 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회 수 : 74개(29개 부서) / 170회 개최 - 위원 수 : 1,054명 / 위원회 평균 14명 - 외부인사(시소속 공무원 외) : 737명 / 전체 위원의 70% - 설치근거 : 법령 57개, 조례 17개 ○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존 위원회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유도 - 위원구성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적극 유도 ⇒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1개 폐지, 8개 법령개정 건의 · 장기적 운영계획으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			

답 변 요 지 서

질문의원	과 호 중	답변공무원	기획행정국장
<div>□ 질문내용</div> <p>도로명주소의 장·단점은 무엇이며 필요성은?</p> <div>□ 답변내용</div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행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2006.10. 4. 제정(2007.4.5시행) ○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」 2007.10.31. 제정 사업개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기간 : 2001~2012 ○ 사업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산시스템 구축 - 도로명판 설치 : 2,903개 - 건물번호판 설치 : 37,000개 - 사업비 : 1,881백만원(기투자액 : 1,453백만원, 77%)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상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산시스템 구축(2001~2003) : 300백만원 - 도로명판설치(2005~2006) : 1,987개(523백만원) - 새주소위원회 구성(13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위원회 개최 : 08.6.10 (358노선 심의) - 도로명 인지도 제고 홍보 : 유선방송, 영화관(TTC), 대형전광판, 신문, 기타 홍보물 등 			

○ 향후계획

- 신규지역 도로명판(916개), 건물번호판(37,000개) 설치
- 도로명 인지도 제고 홍보

4. 도로명 주소의 장단점 및 필요성

○ 장 점

- 1) 길 찾기 편리성 제고 - 정확한 위치정보로 길 찾기 쉬운 점
- 2) 신속한 행정서비스 - 범죄, 화재 등 응급상황 신속 대처
- 3) 국제표준 주소 - 외국인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음
- 4) 길 찾는데 시간과 비용절감 - 연간4조원 절감(행안부 추계)

○ 단 점

- 1) 100여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새주소 변경으로 시민들이 인식·정착할 때까지 길 찾는데 어려움 있음.
- 2) 우리나라는 신개발 지역이 많고 수시 도시계획 개발 등으로 변화에 대처가 안 되고 또한 현 지번주소에 익숙한 상태임.

○ 필요성

- 1)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지번주소 사용국으로 세계화에 장애적 요소가 되어 도로명주소체계가 필요함.
- 2) 길 찾는데 연간 약 4조3천억원의 사회·경제적 비용이 절감됨 (의료, 통신, 택배, 구난, 구조, 방법 등)

답 변 요 지 서 (서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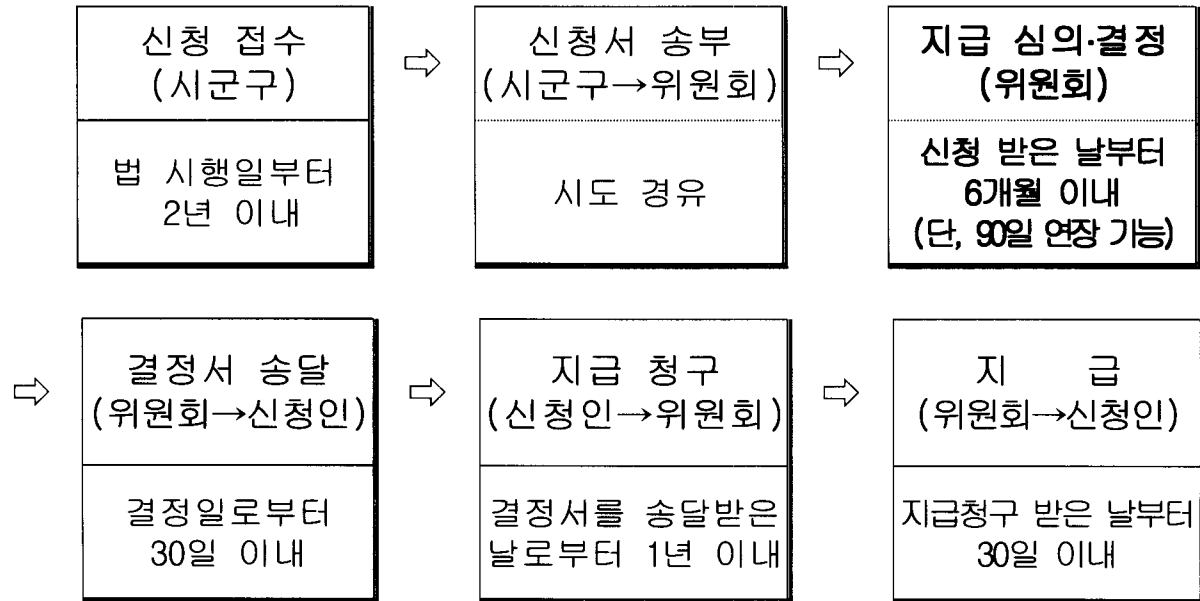
질문의원	과 호 종	답변공무원	기획행정국장
<p>□ 질문내용</p> <p>○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보상대책시행은 어떤가?</p> <p>□ 답변내용</p> <p>○ 근 거 : 「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</p> <p>○ 접수기간 : 2008. 9. 1 ~ 2010. 6. 10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</p> <p>○ 접수장소 : 충주시 총무과 (시청 본관 6층)</p> <p>※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우편접수 불가</p> <p>○ 신청자격 : 1938. 4. 1 ~ 1945. 8. 15 국외 강제동원자 中,</p> <p>① 동원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</p> <p>②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</p> <p>③ 생환자 중 생존자</p> <p>④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</p> <p>※ 유족범위 및 순위 : ①배우자 및 자녀- ②부모- ③손자녀-④형제자매</p> <p>○ 진행현황</p> <p>⇒ 충주시의 경우, 1차~3차 사실조사 접수 건은 1,566건</p> <p>현재(08.08.29) 진상규명위원회 결정완료건 747건 중, 사망자 55건, 부상자 15건, 생존자 277건 (총347건)으로 집계</p> <p>⇒ 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·결정 통보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지원신청 가능함</p> <p>⇒ 충주시청 홈페이지, 지역 5개 언론사를 통한 공고문 게시 및 각 읍면동 각종 회의시 홍보자료 배포</p> <p>⇒ 기간제인부를 활용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활용</p>			

〈보충자료〉

□ 지급대상별 구비서류

지급대상별	지원종류	구 비 서 류
■ 공 통		①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유족대표자 선정서(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시) 1부 ③ 다수 신청인 서명서(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) 1부 ④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(대리인 선정시) 1부
■ 사 망 자 ■ 행방불명자	위로금	① 위로금 지급신청서(사망자, 행방불명자용) 1부 ② 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 1부 ③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
■ 부 상 자	위로금	① 위로금 지급신청서(부상자용) 1부 ② 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(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) 1부 ③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
■ 생환자중 생 존 자	의 료 지원금	①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
■ 미 수 금 피 해 자	미수금 지원금	① 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미수금피해자 제적 등본(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) 1부 ③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

□ 심의·결정 절차



□ 위로금 등 산정기준

구 분	지급 대상	산정 기준
위 로 금 (법 제4조, 영 제3조)	사 망 자 행방불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당 2천만원 「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금전(사망자 30만원)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
	부 상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자세한 금액 산정은 법시행령 별표1~3 참조
미 수 금 지 원 금 (법 제5조)	미수금피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수금 당시 1엔 → 대한민국 통화 2,000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
의 료 지 원 금 (법 제6조, 영 제4조)	생 환 자 중 생 존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